

#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kr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02 교육·보육·가족

03 보건·복지·고용

04 문화·체육·관광

05 환경·기상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07 국토·교통

08 농림·수산·식품

09 국방·병무

10 행정·안전·질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 0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9

## R&amp;D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시행일: 2025년 1월 1일

R&amp;D 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

기존				
구분(%)	당기분			추가분 <sup>1</sup>
	대	중견	중소	
일반	2	8~15 <sup>2</sup>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변경				
구분(%)	당기분			추가분 <sup>1</sup>
	대	중견	중소	
일반	2	8~20 <sup>2</sup>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 <sup>3</sup>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 <sup>4</sup>	40	

<sup>1</sup>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sup>2</sup> (~3년)15%, (3~5년)10%, (5년~)8%<sup>1</sup>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sup>2</sup> (~3년)20%, (4~5년)15%, (6년~)8%<sup>3</sup> (~3년)25%, (4년~)20%<sup>4</sup> (~3년)35%, (4년~)30%

## 02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10

## R&amp;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R&amp;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

구분	기존	변경
인건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적용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인본
R&D용 시설임차료	일반 연구개발에만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에도 적용

인건비 공제 ↑, 공제 적용대상 ↑

## 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및 추가분 공제율 상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를 도입하고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기존				
구분(%)	당기분			증가분 <sup>1</sup>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sup>1</sup>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변경				
구분(%)	당기분			증가분 <sup>1</sup>
	대	중견	중소	
일반	1	5, 7.5 <sup>2</sup>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 <sup>3</sup>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 <sup>4</sup>	25	

<sup>1</sup>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sup>2</sup> (~3년)7.5%, (4년~)5%<sup>3</sup> (~3년)9%, (4년~)6%<sup>4</sup> (~3년)20%, (4년~)15%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수도권, 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취득기한	2024. 1. 4.~2026. 12. 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초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주택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신규취득 주택요건	소재지	수도권 밖의 지역
	규모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기한	2024. 1. 10.~2025. 12. 31.
효과		1주택자로 간주,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

\* 적용기한: 2024. 12. 31.(변경전) → 2027. 12. 31.(변경후)

\*\* 적용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① (전용면적) 85㎡ 이하
- ② (임대기간) 10년 이상
- ③ (인상을 상한) 전년 대비 5%
- ④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2027. 12. 31.까지)

-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요건 충족 시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적용요건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 ②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 ③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기존	변경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확대

- (총소득 기준) 연 3,800만원 → 연 4,400만원



## 국채 등 비과세 관련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시행일: 2025년 1월 1일

국외투자기구 및 외국인투자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외투자기구 비과세 신청 절차가 간소화

기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적용</li> <li>- 공모국외투자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적용 대상 확대</li> <li>- 공모국외투자기구, <b>사모국외투자기구</b></li> </ul>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해당 국외투자기구 명의로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하위투자자별 정보를 취합할 필요 없이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  
사모·공모펀드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 추세에 맞추어 조세제도를 선진화한 것으로서, 펀드투자자의 편의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합리적 개편

시행일: 2025년 1월 13일

금융권의 획일적인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 시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의 부과도 금지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시행일: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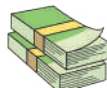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4만원→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198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성실납입자(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는 5~10점 신용점수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정부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



신용점수  
추가가점

최소 5~10점 이상



부분인출 서비스  
신규 도입

2년 이상 가입자로 누적  
납입금액의 최대 40% 이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0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80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됩니다.



0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81

## 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시행일: 2025년 3월

지금까지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대상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면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그간의 대학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학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시행일: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I 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 8구간 이하(100만명) → 9구간 이하로 확대(총150만명), 최대 100만원 등 지원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대상 14만명 → 20만명 확대, 지원단가 인상

-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저소득 대학생 대상 연간 최대 240만원 지원



## 05

##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87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

- 정부지원 가구: (2024) 11만 가구 → (2025) 12만 가구

- 정부지원 대상: (202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2025) 200% 이하

-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 정부지원  
비율 상향(2025)

\* 기준 중위소득(120~150%),  
취학아동(6~12세)가구 등(5~10%)

- 영아돌봄 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2025)

\*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



## 06

##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88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 따르지 않을 시 국제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

시행일 : 2025년 1월 1일

한부모가족에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급(기준중위소득 63%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37만원 지급(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등학생 자녀까지 학용품비 지원 확대  
(1인당 연 9만 3천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시행일 : 「성폭력방지법」 2025년 4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됩니다.

- 삭제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 마련
-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4개소 → 15개소)
-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3종 → 5종)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 01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2

##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 → **250만원**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달) 200만원 → **250만원**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 250만원 → **30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출 시 월 통상임금 상한액: (최대) 200만원 → **220만원**

## 02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4

##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육아휴직: 1년(3회) → **1년 6개월(4회 분할 사용 가능)**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 **20일(4회 분할 사용 가능)**난임 치료 휴가: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 → 12세, 최대 3년

출산 전후 휴가(미숙아 출산 시): 90일 → 10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혜택 적용 확대: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도 혜택 적용 가능



## 03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6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업무분담지원금」 지원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 월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
-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원 지원 /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원(2024. 7. 1. 신설)

## 04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117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확대 개편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존 모든 업종의 취업애로청년에서 빈일자리 업종의 모든 청년으로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I유형	II유형(신설)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1년	2년
720만원(1년 지원)	720만원(1년 지원)
-	480만원 (2년) *18·24개월차 각 240만원
5.5만명	4.5만명

\* 빈일자리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이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는 신용제재, 정부 등 보조금 및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사업주에게 '폭염 등에 근로자가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가 부과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는 온열질환 예방물품이 지원됩니다.



## 식약처, 신규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시행일: 2025년 6월 14일

- 2025년 6월 14일부터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을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 위생용품 신규편입 제품
  -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
  - 문신용 염료: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



## 국내 최초 생약 및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 '생약안전연구원' 설립

시행일: 2025년 4월

- 2025년 4월 생약 및 한약 등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가 가능한 생약안전연구원이 설립됩니다.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24일

•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됩니다.

- (디지털의료기기)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의약품
-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의료의 지원 및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디지털의료기기 제외)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에 따른 게임물관련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움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게임물제공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대상 사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PC방)	게임물제공사업자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게임제공업: 성인오락실</li> <li>•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오락실</li> <li>•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유통게임제공업: PC방+청소년게임제공, PC방+타업종</li> </ul> </li> </ul>
위반사항	게임물 등급 이용·제공 위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위반사항 추가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정규모: 5만<sup>m</sup> 이상 30만<sup>m</sup> 미만
- 필수시설: 2종(공공편의시설, 관광숙박시설) 이상
- 승인권자: 시·군·구청장
- 혜택: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등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시행일: 2025년 1월 31일

- 분산되어 있던 해양레저 관련 법들을 「해양레저관광진흥법」으로 통합
-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방향 제시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자원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2025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환경·기상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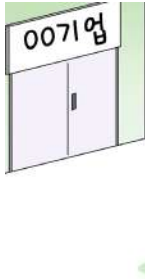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2

## 배출권거래제 소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시행일: 2025년 2월 예정

-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소량배출사업장(온실가스 연 배출량 3,000톤 이하)이 주소를 이전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동일 업무 수행,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만 해당



주소이전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주소이전 신고대상 제외

## 0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3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시행일: 2025년 6월

-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순매도량 3배 → (변경) 순매도량 5배



## 0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4

##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

시행일: 2025년 하반기

-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중개업이 도입됩니다.

- 할당대상업체 및 제3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거래 가능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통해 편리하게 거래



## 04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175

##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녹색전환보증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 2025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시행됩니다.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거나 우수 환경기술 보유기업 등에 보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선정 후 최대 100%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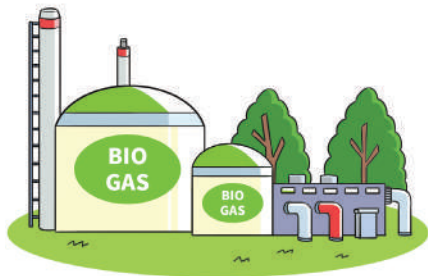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시행됩니다.

- 공공 의무생산자(전국 지자체) 생산목표:  
2025년 50% → 2045년 80%
- 민간 의무생산자 생산목표:  
2026년 10% → 2050년 80% 단계적 확대

- 생산목표율: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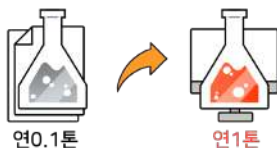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이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2024) 연간 0.1톤 → (2025) 연간 1톤
- 등록기준 상향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으로 등록·신고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신고 제도를 내실화합니다.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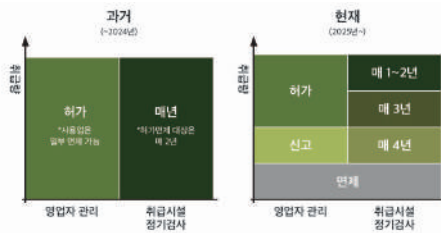


##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개선

시행일: 2025년 8월 7일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2025년 8월 7일부터 위험도 및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존(~2024년)	변경(2025년~)
• 취급량과 관계 없이 영업 허가	• 소량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영업신고
•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1년(2년) 주기로 정기검사	•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 차등화 (1~4년)



##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 통합생산

시행일: 2025년 하반기

- 급변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다양한 해양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정보를 제공합니다.

- 우리나라 해역과 극지의 해수온, 해수면 높이, 해빙 등 다양한 기후요소 감시·예측
- 기후요소에 대한 전월 감시정보 및 1개월(주간), 3개월(월간) 예측정보 제공



## 위험기상을 빠르게 알리는 긴급재난문자 확대

시행일: 2025년 5월(지역 확대) / 11월(요소 확대)

- 2025년 5월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2025년 11월부터 대설에 대한 안전안내문자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선제적 폭염 정보 제공

시행일: 2025년 6월

- 2025년 6월부터 선제적 폭염 대비를 위해 폭염 정보를 더 빨리 제공합니다.

- 최대 5일까지 폭염 발생 가능성 정보를 재난 관계기관에 시범 제공
- 폭염 영향예보를 2일 전에 제공



## 「해수면 온도에 대한 기후예측」 시범 서비스

시행일: 2025년 11월 23일

- 2025년 11월 23일부터 한반도 주변 해역의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매월 23일(월1회) ‘해수면 온도에 대한 3개월 전망’을 발표합니다.
- 기후위기 사전 대응을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 3개월 전망”을 매월 23일 월별로 발표합니다.



2025년 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 01

##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10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시행일: 2025년 2월 7일

2025년 2월 7일부터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자원안보위기를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효율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체계를 마련합니다.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 02

##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211

## 통상조약 등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합니다.

- 상품·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매출액·생산량이 5% 이상 감소 또는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 지원
- 통상영향조사 및 기술·경영 환경 진단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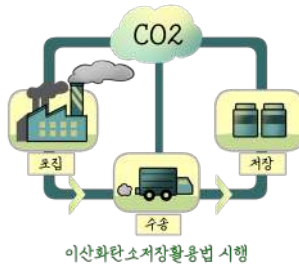


##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

시행일: 2025년 2월 7일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을 위한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이 시행됩니다.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의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 집적화단지 지정하여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 구축



##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통시장별 역량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민간 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1:1로 밀착 지원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대상 확대

시행일: 개별 기술분야별 상이

·첨단기술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확대됩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술분야) 우선심사 신청대상의 세부기술이 확대됩니다.
-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 기술분야) 우선심사 신청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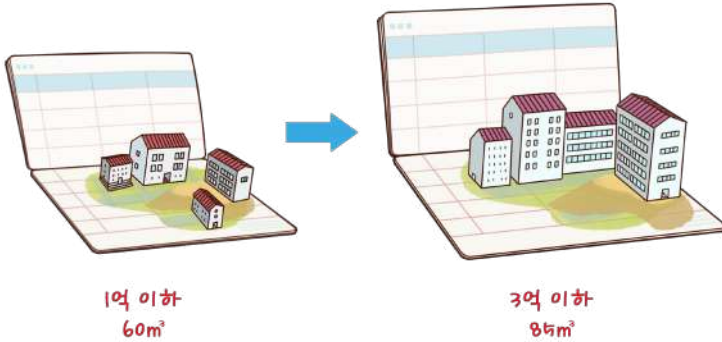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0

## 주택 청약시 非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시행일: 2024년 12월 중(예정)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합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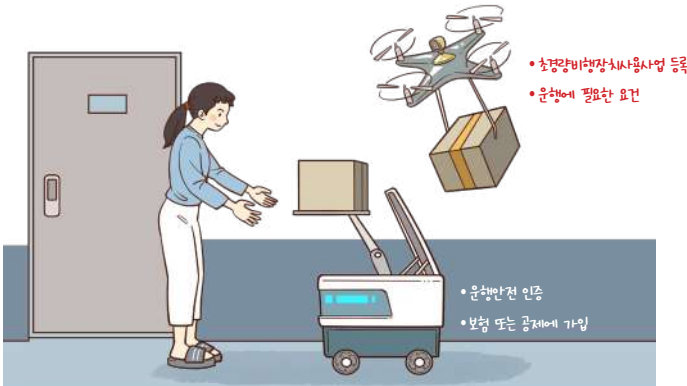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231

## 드론·로봇으로 택배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택배서비스 사업시 드론과 실외 이동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할 수 있습니다.



# 「자율운항선박법」 시행으로 무인선박시대 기반 마련

시행일: 2025년 1월 3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합니다.

- 관련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전략을 담은 5개년 로드맵 수립
- 규제 완화된 운항해역을 지정·운영
- 기술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평가 지원 등 민간 기술 실증 적극 지원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 0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65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빈집 활용 지원 신설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과 빈집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 빈집 거래 활성화와 민간 협력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 지자체 실태조사로 빈집 정보 구체화
- 거래 촉진을 위해 중개인 활동비 지원

## 농촌 소멸대응 빈집재생 지원

- 빈집우선정비구역 등 리모델링 → 주거·위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



## 0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66

## 개사육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시행일: 2025년 1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부터 개사육농장주와 개식용도축상인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합니다.

## 폐업 지원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 폐업이행 촉진지원금(농장주 한정) 지원

## 전업 지원

-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지원



## 0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67

##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허용

시행일: 2024년 11월 12일

## 기존

- 기간 산업단지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업인 수직농장은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 변경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주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 0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268

## 농업용 지게차 건설기계에서 농업기계로 전환

시행일: 2025년 상반기

## 기존

- 2톤 미만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 혜택에서 제외되고,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 변경

2톤 미만 농업용 지게차가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검사 및 과태료 등 규제 완화

농업기계 구입시 융자, 보조

취·등록세 면제(34%)

농업기계 임대 등



##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시행일: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 기존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9개였습니다.



### 변경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2025년 15개, 향후 30개로 연차별 확대됩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시행일: 품목별 재배시기를 고려한 가입기간 별도 설정 예정

###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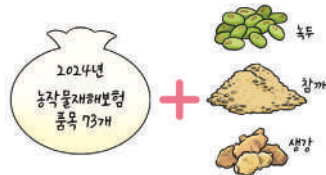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73개였습니다.



### 변경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2025년 76개, 2027년까지 80개로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녹두, 참깨, 생강 품목이 추가됩니다.



2025년 76개로 확대

##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시행일: 2025년 1월 3일

## 기존

- 기존에는 ICT기술 결합 비닐하우스나 고정식 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간 일시 사용 후 철거,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외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 비닐하우스,  
고정식온실  
ICT결합 수직농장  
<농지전용 면제>



## 변경

앞으로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모든 형태 수직농장 <농지전용 면제>

모든 형태 가능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시행일: 2025년 1월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업과 농촌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행일: 2025년 상반기 운영 예정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024.12)를 기념하고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미식테마를 중심으로 2032년까지 K-미식벨트(TOP 30)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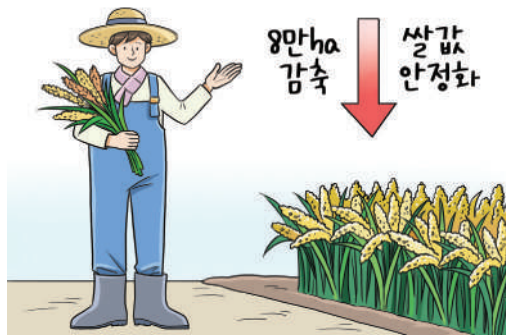
2025년에는 3개의 벨트(김치, 전통주, 인삼)를 추가 조성하여 국내 미식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하락세인 쌀값을 반등시키고자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2025년에 최초 시행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행일: 2025년 3월 4일

생계급여 중 임신부·영유아·초중고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1인 가구 월 4만 원~10인 이상 가구 월 18만 7천원(4인 가구 기준 연 최대 100만 원)
- 지원품목: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어항 근처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소규모어가 직불금이란?

5톤 미만의 어선 소유, 양식수산물 연간 판매액 1억 원 등 영세한 어가에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중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 심사·평가를 실시합니다.

- 평가 대상 : 2026년 7월~2027년 6월 내  
면허가 만료되는 자
- 평가 항목 : 어장환경·관리실태



##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폐어구 수거사업 본격 추진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2025년 1월부터 버려지던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폐어구 수거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중국 불법 범장망 철거
- 먼바다의 폐어구 수거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 0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15

## 2025년 병 봉급 인상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병 봉급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이병 : 64만 원 → **75만원**  
 일병 : 80만 원 → **90만원**  
 상병 : 100만 원 → **120만원**  
 병장 : 125만 원 → **150만원**

\* 자산형성 프로그램  
 40만 원 → **55만원**

## 0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316

##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재정지원금이 인상됩니다.



최대 4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55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 01

##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39

## 형사공탁 악용을 막는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

시행일: 2025년 1월 17일

## 기준

-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가는 사례(소위 '먹튀공탁') 발생



## 변경

판결 전 형사공탁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신설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탁법”에 신설



## 02

## 법무부

자세한 내용은 P.340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시행일: 2025년 3월 21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구조금이 약 20% 증가하여 직접 지원 확대
- 피해자의 구조금 관리능력 부족 시 분할 지급 가능
- 구성권 행사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가능
- 외국인도 상호보증 없이 구조금 지급
- 정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수령 가능



##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중)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실제 발급 시기는 추후 공지 예정



##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혜택알리미) 서비스 개시

시행일: 2025년 중

2025년부터 정부가 국민 상황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를 개시합니다.

- 민간 앱(은행앱, 네이버 등)을 통해 이용
- 2025년 청년, 구직, 출산, 전입(이사) 4개 분야 800여개 공공서비스  
→ 2026년까지 3,300여 개 공공서비스로 확대 계획



## 05

##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351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 2,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기준

-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 변경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되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06

##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358

##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제도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3일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가 시행됩니다.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 준수, 위험성 평가 이행, 선내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소형어선(2명 이내) 탑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일: 2025년 10월 19일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규모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구명익)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시행일: 2025년 6월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위반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차량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 기존

-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는 차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 변경

이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사업 시행

시행일: 2025년 1월 1일

2025년부터 국내 체류 동포들이 국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별 국내동포 정착지원
- 국내 소재 동포 관련 민간단체 사업지원
- 국내 체류 동포 정주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국내동포 정착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

시행일: 2025년 1월 1일

한국 휴대전화 없는 재외국민도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으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전자여권과 해외체류정보를 활용한 신원확인 정보 제공으로 재외국민 민간 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지원
- 전자정부, 금융, 의료·교육 등 각종 민간 온라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



## 소비자 우롱하는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규율 확대

시행일: 2025년 2월 14일

2025년 2월 14일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며 온라인 눈속임 상술, 일명 다크패턴에 대한 규율이 가능해집니다.

통판판매업자는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추천·보증을 하는 경우 표시 의무화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에서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명시해 광고임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